

경제

비정규직 577만 3,000명

전체 근로자 10명중 3.7명...임금은 정규직의 64% 불과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국내 산업현장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64%에 불과한 데다 근로기간도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임금근로자 1천 573만 1천명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 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7%에 달했다.

정규직은 995만 8천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가운데 한시적근로자는 63.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는 45.3%로 조사됐다. 한시적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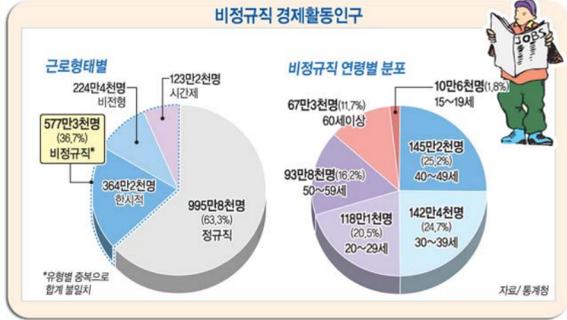
월평균 임금 격차도 좁혀져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올해 1~3월 월평균 임금은 127만 3천원으로, 정규직(198만 5천원)의 64.1%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

은 172만 4천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로기간은 2년 2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5년 11개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임금근로자 평균 근로기간(4년 6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설문 결과 정규직은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응답비율이 49.0%로 가장 높았지만 비정규직은 1년 미만(56.9%)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296만 8천명(51.4%)으로 여성(280만 5천명)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145만 2천명) ▲30대(142만 4천명) ▲20대(118만 1천명) ▲50대(93만 8천명) 등의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비정규직이 227만 5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108만 7천명)의 종사비중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가 276만 5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별로는 고졸 244만 1천명, 대졸 이상 177만 4천명, 중졸 이하 155만 8천명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비율은 41.8%, 국민연금 39.3%, 고용보험 38.8%로, 전체 임금근로자(국민연금 62.6%, 건강보험 63.9%, 고용보험 55.6%)보다 사회보험 가입비율도 훨씬 낮았다. /최경호기자 choice@

구직자 78% “면접때 모욕감”

면접관, 지원자 경력·능력 무시 발언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입사면접 때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했던 적이 있으며 이는 주로 지원자의 경력·능력을 무시하는 면접관의 발언이나 불성실한 면접 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지난 19~21일 자사회원인 구직자 2천 495명을 상대로 면접시 모욕감·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78.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이 모욕감을 느낀 이유로는 ‘경력이나 능력을 무시하는 면접관의 발언’(3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면접관의 불성실한 태도’(31.4%), ‘외모나 성별·나이와 관련된 차별적인 질문’(16.4%), ‘재산·종교 등 지나친 사적 질문’(11.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은 가장 황당하고 불쾌했던 면접유형으로 ‘사적인 문제를 따져 묻는 신원조회형’(26.4%), ‘채용공고에 없던 자격조건을 내세워 당황하게 하는 허탈형’(24.2%), ‘직무내용이나 연봉 등을 면접 때 바꿔버리는 오리발형’(19.2%) 등을 꼽았다. ‘금방 면접을 끝내버리는 인스턴트형’(15.5%), ‘열심히 회사 자랑만 늘어놓는 회사광고형’(9.9%) 등의 면접유형이 불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기업 입사면접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합격 여부를 암시하는 면접관의 태도나 분위기 연출’(31.4%), ‘지원자에 대한 사전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면접관’(30.1%), ‘지나치게 긴 대기시간’(23.4%), ‘지나치게 짧은 면접시간’(10.2%) 등이 지적됐다. /연합뉴스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뎀

시공업체 영업정지

건교부,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부실 시공으로 인해 5명 이상 사망할 경우에 시공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 5명 이상 사망사고가 감리 부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리업체도 1년간 영업정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연도교 상판 붕괴 사고, 국도화령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중대반 과실로 부실 시공해 5명 이상 사망하면 해당 시공업체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지금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징금 처분은 없고

영업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개정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할 계획이다.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실제 시공하지 않고도 시공을 위장해 국고를 횡령하는 등 국고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해당 감리업체의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감리수행지침상의 이행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또 감리업체의 감리부실에 따른 중대한 안전사고로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연합뉴스



완도 앞바다에서 잡은 초대형 돛돔 23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수산매장에 길이 170cm, 무게 150kg에 이르는 대형 돛돔이 등장해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초대형 돛돔은 22일 새벽 완도 앞바다에서 잡힌 것으로, 가격은 200만원을 호가한다. /연합뉴스

“포털 사회적 책임 부과”

정통부, 법·제도정비 하반기 입법 추진

정보통신부가 포털 업체들에 대해 법·제도 정비를 통해 하반기부터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대해 시장 기능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느끼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포털 산업이 발전한 것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영향력이 미디어측면에서나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나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차관은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분야로 명예훼손,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방지, 광고 등 다양한 주제가 포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법을 만들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것이며 이와 함께 필요한 행정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의 인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들에게 요금을 내리라고 울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신 결합상품 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유카드

7월부터 할인·적립폭 축소

주유할인·적립카드의 할인·적립폭이 7월부터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에 주유 할인카드의 경우 월당 최대 60원, 적립카드의 경우 월당 최대 80원으로 할인·적립폭을 줄이도록 구두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 카드사들은 7월 1일부터 할인·적립폭을 줄이기로 하고 시스템 변경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전담 일정금액을 해당 카드로 사용한다는 조건 아래 할인카드의 경우 휘발유 월당 최고 130원까지 할인해주고 있으며 적립카드도 월당 최고 120원까지 적립해주고 있어 금융권이 경쟁 과열을 우려해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주유카드의 경우 회원의 선호도와 충성도(로열티)가 높아 어느 카드사가 먼저 시행을 하느냐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주유

카드의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올해 초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주유할인·적립카드에 대한 혜택 축소 계획을 제출했고 이 계획에 따라 카드사들이 혜택 축소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금융권이 구체적인 축소폭을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할인·적립폭 축소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혜택 축소 전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 카드사 약관에는 제휴업체의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면 기존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며 “주유 할인·적립카드의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기존 회원도 향후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공요금 인상때 민간전문가 참여

7월부터 전기·철도·버스로 등 타당성 검토

빠르면 7월부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전기와 철도·고속버스·시외버스 등 중앙부처가 관할하는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심사 또는 협의하는 절차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면서 “자문위는 공공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하지 않지만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부총리에게 조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그동안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이들에게 부과하던 부당이득세를 과징금으로 대체했고 과징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세부적 절차도 담았다.

최고가격제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

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주요 수도·전기료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데, 1970년대 오일쇼크나 1990년대 걸프전쟁 발생했을 때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최고가격을 발령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는 사실상 작동하지 10여년이 넘는 제도인데, 이를 위반할 때 세금 성격의 부당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 대체하도록 했다”면서 “시행령은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성용 금호명예회장 2주기 추모식

박성용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의 2주기 추모행사가 가족과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 조촐하게 거행됐다.

23일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 유가족, 황인성 전 총리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선영에 모여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박성용 명예회장은 문화예술에 큰 관심을 갖고 클래식 영재 지원과 육성에 열성을 보여 예술의 전당 이사장과 통영 국제음악제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지난해 1주기에 크게 행사를 치렀지만 올해는 2주기에 가족과 일부 지인들만 모여 간소하게 추모 행사를 치렀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 세계 TV시장 평정

매출기준 5분기 연속 1위... LG는 3위

지난 1·4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매출기준으로 5분기째 1위를 차지하고, LG전자는 3위로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와 업계에 따르면 세계 TV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매출기준 시장점유율이 작년 4·4분기 14.5%에서 올해 1·4분기 15.8%로 늘어나면서 5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2위인 소니의 매출 점유율이 작년 4·4분기 12.8%에서 올해 1·4분기 11.8%로 떨어짐에 따라 지난해 4·4분기 1.7%포인트에 불과했던 소니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1·4분기에는 4%포인트로 벌리며 세계 1위 업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했다.

삼성전자는 출하량 기준으로도 시장점유율이 작년 4·4분기 11.6%에서 올해 1·4분기 11.7%로 소폭 상승하면서 3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LG전자도 매출기준 시장점유율이 작년 4·4분기 8.3%



로 4위였으나 올해 1·4분기에는 9.3%로 늘어나면서 필립스(7.5%)를 제치고 삼성전자와 소니(11.8%)에 이어 3위로 한 단계 올랐으며, 출하량 기준 시장점유율도 작년 4·4분기 9.4%에서 올해 1·4분기 10.6%로 증가해 삼성전자에 이어 3분기 연속 2위를 지켰다.

LCD TV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4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92%의 매출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시장점유율이 작년 4·4분기 15.4%에서 올해 1·4분기 17.4%로 증가, 작년 4·4분기 소니(17.1%)에게 빼앗겼던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연합뉴스

기업체 4곳중 1곳에서 직원 가족까지 챙긴다

가족친화적 복지제도 운영

기업 4곳 중 1곳에서만 직원과 그 가족까지 챙기는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396개사를 상대로 ‘가족친화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중 24.5%가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운영중’이라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평균 4.1개의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53.1%, 중견·중소기업의 22.0%가 가족친화제도를 운영중이었다.

이들 기업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내 가족친화제도(복수응답)는 ‘육아휴직제’(57.7%), ‘가족 초청행사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51.5%),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경제적 지원제도’(44.3%), ‘가족휴가지원’(36.1%), ‘남성 출산휴가제’(29.9%),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무제’(28.9%) 등이었다. ‘직장내 수유지원 프로그램’(9.3%), ‘직장내 보육시설 등 보육서비스 지원’(6.2%)처럼 육아를 부담해야 하는 여성을 위한 가족친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인 1천 942명에게 ‘현 직장에서 실시되기를 바라는 가족친화제도’(복수응답)를 묻은 결과, ‘가족휴가 지원제도’(44.1%), ‘탄력근무제’(40.6%),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경제적 지원제도’(32.9%), ‘생태근무제’(23.0%)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